남양 하청업체들 "지급보증금 달라"

원청 부도로 25개사 24억 못받아

보험사 상대 분쟁신청·소송 제기

#1. 하도급업체 M사는 지난해 하청 공사대금 2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지급보증을 섰던 S보증사에 공사대금을 요청하는 지급신청서를 냈다. 원청업체인 N건설로부터 받은 어음이 N건설의 부도로 휴지조각이 돼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S보증사는 보증기간이 만료됐다며 M사의 요구를 거절했다. N건설로부터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데다 이미 보증기간도 지났다는 이유였다. M사는 너무 억울해 금융감독원에 보험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2. 하도급업체 J사도 M사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지급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S보증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보증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도급대금 보증보험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간 남양건설과 관련한 보증금 분쟁만 하도급업체 25개사에 24억여원을 넘는다.

2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와 남양건설 하도급업체들에 따르면 남양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해서 S보증사에 57억여원의 보증금 계약을 맺었다. 남양건설이 만약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못할 경우 S보증사가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남양건설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대금을 현금 대신 어음(2~4개월)으로 줬고, 이것이 분쟁의 불씨가 됐다.

어음 성격을 놓고 '공사대금이냐', '약속의 징표냐'라는 논란과 보증기간의 경과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S보증사는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했고,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주겠다 약속일 뿐이지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어음은 '약속의 징표'이지 돈이 아니다"며 "공사대금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증기간 논란도 제기됐다.

S보증사는 '어음만기일이 보험계약기간 밖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하도급업체는 '어음발행일이 보험계약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도급업체와 보험사간 논쟁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하도급업체 M사 등 10여개 사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냈다. 같은 이유로 J사도 지난 5월 광주지법에 지급보증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J사는 소장에서 "남양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사는 1억152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약속어음 지급기일(5월6일)이 보증보험기간(4월29일) 이후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면서 "하지만 약속어음은 대금 지급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보험기간 내에 어음이 발행돼 당연히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보증사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더위 쫓는 죽부인 28일 신세계 이마트 서울 용산역점이 마련한 죽부인, 대자리 기획전에서 모델들이 죽부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층 4명중 1명 사실상 백수

15~29세 청년층의 약 4분의 1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가운데 25세 이상 청년 실업자는 1년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생애 전체적으로 1억원 넘게 소득을 잃는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수석연구원은 28일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 대책'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3.0%로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 8.6%의 3배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체감 실업률이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당 근로 시간이 36시간에 못 미치는 취업자를 비롯해 취업 준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쉬고 있는 사람까지 실업자로 간주한 실업률이다.

이러한 취업 애로층은 15~29세에서 116만2000명에 달해 공식 실업자 37만명의 3.14배에 달했다. /연합뉴스

지역 중소제조업 내달 경기도 안좋다

8월 경기전망지수 92.2 … 4개월 연속 하락

중기중앙회 107곳 조사

광주·전남 중소 제조업체들은 8월 업황이 다소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10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8월 중 중소기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업황전망 SBHI(중소기업건강도지수)가 92.2로 전달(97.1)보다 4.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4월 103.3 이후 4개월 연속 떨어졌다. SBHI는 100 미만이면 '악화', 100을 초과하면 '호전'을 뜻한다.

이는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다 기업들의 하계휴가 등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항목별로는 원자재 조달은 전달보다 상승한 반면 생산·내수·수출·경상이익·자금사정은 전달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설비(104.0→102.9)와 제품재고(98.5→100.5)는 과잉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88.0→88.5)은 전달보다 높아졌으나 여전히 인력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7월 중 중소기업 경영애로 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5개월 연속 상승, 내수 부진, 업체간 과당 경쟁, 판매 대금 회수 지연, 인력확보 곤란과 인건비 상승 등을 꼽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상반기 주택 인허가 수도권 늘고 지방 줄어

올 상반기에 인허가를 받은 주택건설 물량이 11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상반기 70%에서 50%로 떨어졌고, 특히 서울에선 아파트보다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총 11만309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11.5% 늘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40만 가구와 비교해서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인허가 물량이 몰리더라도 연간 기준으로는 1998년 당시의 IMF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상반기 인허가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만5180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37% 늘었지만, 지방은 4만5129가구로 12.1% 줄었다.

서울(1만4047가구), 경기(4만531가구)는 34.7%, 70.3% 증가했고 인천(1만602가구)은 20.7% 감소했다.

/연합뉴스

中企 그린디자인 기술개발 광주전남중기청 업체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임충식)은 저탄소·고효율 녹색제품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그린디자인 기술개발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범위는 해외 환경규제 대응 제품 개발과 일반 친환경 제품 개발 분야이며,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1억원씩 총 15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360-9152.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가짜 中企'에 과태료

내년부터 … 지원 사업비 환수도

각종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중소기업 행세를 하는 가짜 중소기업에는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입법예고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 이 같은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 세금이 본래 취지대로 쓰이려면 정책적 혜택이 엉뚱한 기업에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게 과태료 조항을 신설한 취지다.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기업인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과태료 부과 외에 사업비 환수 등을 통해 '위장 중소기업'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호고속, 업계 첫 온실가스 감축 협약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약

금호고속(대표이사 김성산)은 28일 육상 운송업계 최초로 에너지관리공단과 수송부문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협력 협약식을 했다.〈사진〉

금호고속은 1995년부터 연비 전산화로 차량별 연료 총소모량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연비 불량차량에 대한 관리와 연비 우수자 포상 등을 통해 연비 개선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차량 운행시 법정속도 이상 주행하면 관제실에서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과속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터미널이나 휴게소에서 10분 이상 공회전시 이를 실시간 감지, 해당 운전자에게 주의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도 함께 운영 중이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제3자 검증은 이미 마쳤고, 차량의 운행·정비·세차·주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증받아 데이터의 신뢰성도 확보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호고속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 노하우를 체계화하고, 모범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정보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조 영업적자 한전 500% 성과급 논란

올 상반기에 2조 원대의 영업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전 직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작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인 'S등급'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임직원 1만9000여명에게 기본임금의 50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전 직원들이 지난 6월에 이어 9월과 12월에 나눠받게 될 성과급 총액은 3600억~3700억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전은 지난 22일 올 2분기 영업손실이 1조2587억원에 달해 적자폭이 전분기 대비 16.6% 늘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전체로는 2조3383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773.47 (+5.16)

▼ 코스닥지수 486.75 (-0.99)

금리 (국고채 3년) 3.86%

▲ 원·달러 환율 1,184.10원 (+2.6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